

동향&이슈

NO. 1

2020.04.06

여수 · 대불국가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

CONTENTS

이슈1/여수 · 대불국가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결과

이슈2/목포지역 택시 전액관리제의 현황과
정착방안

동향/코로나19관련 노동 권익상달

우리센터 동정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12. 3층 전화 : 061)723-3860~1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전화 : 061)287-3860~1 팩스 061)287-3862

홈페이지 : <http://www.jecec.kr> /편집인 : 정책기획팀 문보현 / 발행인 : 문길주

이슈 1

여수·대불국가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결과

– 여수·대불산단 작업복 세탁소, 통근버스, 조식 식당

1. 국가산업단지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역사를 시작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문길주

2. 여수·대불산단노동자작업복세탁소, 통근버스, 조식식당수요 조사결과

전남노동권익센터정책기획팀장 문보현

I. 들어가며

II. 여수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수요조사결과

III. 대불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통근버스운행·
조식 식당 수요조사결과

IV. 맺으며

국가산업단지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역사를 시작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문길주

- “이놈의 작업복 제발 집으로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노동자의 소망-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는 2017년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할 때, 하남산단 노동자들이 건강 상담을 받으러 오면서 종이가방에 작업복을 넣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필요성을 느꼈다. 산단 내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회사에 세탁 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1주일 내 입었던 작업복을 집에 가지고 가서 세탁한다고 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가족의 빨랫감과 섞이면 혹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며 “이놈의 작업복 제발 집으로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토로하였다.

어느 노동자의 소망은 지자체가 나서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에 조금만 힘을 보태 주면 될 일이라 싶어, 2018년 광주시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제안,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해서 광주에 불게 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바람은 시의회의 예산삭감 등 역경을 넘어 마침내 올해 7월에 문을 열게 되었다. 한편, 광주의 움직임을 눈여겨본 경남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도의 사회혁신추진단이 노사단체와 협업체제를 마련, 2019년 1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1층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만들어 전국 1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는 여수, 대불, 광양 등 3개의 국가산단과 광주와 전남 경계에 빛그린산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산단이라고는 하지만 50인 미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70%를 차지, 작업환경은 물론 노동복지 또한 아주 미흡하다.

- 여수·대불국가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수요-

우리 센터는 개소 후, 첫 번째 조사사업으로 2월 3일부터 8일 동안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여수지부와 함께 여수산단 작업복세탁소 수요조사를, 2월 10일부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대불산단의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작업복세탁소 외에 통근버스, 조식 식당 수요조사를 하여, 지난 3월 5일에 여수시청, 3

월 11일에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각각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수산단 작업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은 93.2%로 노동자들이 용접, 도장, 열처리 과정에서 분진 등 각종 유해 물질에 늘 노출되는 상태이며, 응답자의 91.6%가 작업복을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자기 비용으로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어 노동복지 수준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작업복 세탁 비용 역시 95.2%가 자기 부담이며, 세탁은 주로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종료 후에 샤워하지 못하고 퇴근하는 비율이 99.6%에 이르러 여수산단 건설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작업복 세탁은 물론 씻을 수조차 없는 아주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있었다.

대불산단 작업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 64%가 화학물질, 용접, 분진, 도장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상태이고, 작업복 세탁은 응답자의 75%가 집에서 세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근버스 운행 수요는 응답자의 94%가 자가용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다른 지자체나 산단은 노동자 편의와 교통체증, 대기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대불산단은 통근버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조식 식당 수요 조사에서는 대불산단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 플랜트, 대불산단은 조선업으로 특성상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함으로써 2차, 3차 노출이 이뤄지고 있어 가족의 건강권까지 침해되는 등 전남지역 국가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샤워 시설, 통근버스 등 노동자의 건강복지에 대한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전라남도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많은 우수 인력 외부 유출이 걱정스럽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노동복지의 기본인 세탁할 권리, 작업 후 샤워할 권리가 조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은다면 이른 시일 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등의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 출발점을 지났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험로를 걸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식 식당, 통근버스 실태조사를 위해 2월 추운 겨울을 길거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수산단 건설노동자, 대불산단 노동자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여수·대불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통근버스, 조식식당 수요 조사결과

전남노동권익센터정책기획팀장 문보현

I. 들어가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 장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센터에서는 크나큰 이슈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작업복이나 통근버스, 조식 식당 등 노동권익과 복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을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다. 각 산단의 노동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파악, 국가산업단지 내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시설의 하나인 공동 작업복 세탁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남 도내 국가 산업단지 2곳(동부는 석유화학 플랜트가 집중되어있는 여수산단, 서부는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암 대불산단)의 중소기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간이 세탁소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3월 5일과 같은 달 11일에 각각 여수시청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발표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수산단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와 대불산단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각각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지방의회의원들은 작업복세탁소 건립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는 물론 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간략하게 조사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공표 이후의 대응까지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각각 산단 별로 여수는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대불은 작업복세탁소, 통근버스 운행 및 조식 식당 수요조사 결과를 각각 요약정리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한다. 여수는 통근버스, 조식 식당 문제는 해결 혹은 개선과정에 있고, 대불은 통근버스, 조식 식당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II. 여수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수요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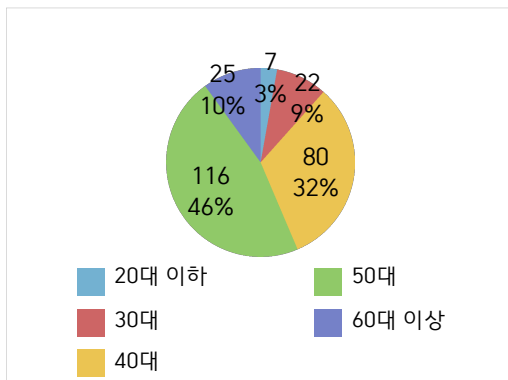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조 사 명: 여수국가산업단지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관한 수요조사
- 조사 목적: 산업단지 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조사 방법과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서면조사(기간 중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 표본 (500부), 유의미 설문조사서 250부
 - 설문 내용: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용 수요 조사(18문항)
 - 작업복 지급실태, 오염된 작업복의 세탁장소, 산단 내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필요 여부, 설치 시 시설 이용 여부 및 세탁비용 본인부담률 등을 내용으로 함
 - 산업단지 내 작업 중인 조합원은 12,000명(조사기간 내), 석유화학 및 화학 관련 플랜트 건설 업무에 종사함
- 조사 기간: 2020년 2월 3일부터 2.10일까지(8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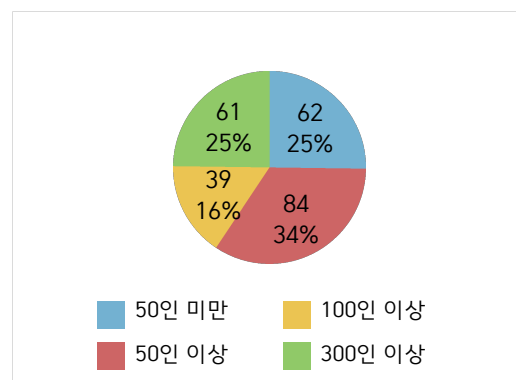
2. 주요결과 요약

1) 일반 사항

-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구성은 남성 비율이 높고(전체 응답자의 91%),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8.4%를 차지, 현장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짐
 - 연령별 분포는 50대 46.4%, 40대 32%, 60대 이상 10%, 30대 8.8%, 20대 2.8% 순으로 50대 이상이 56.4%로 나타남
- 근무 사업장 규모는 50인 이상 100인 34.1%, 50인 미만 25.2%, 300인 24.8%,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9% 순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5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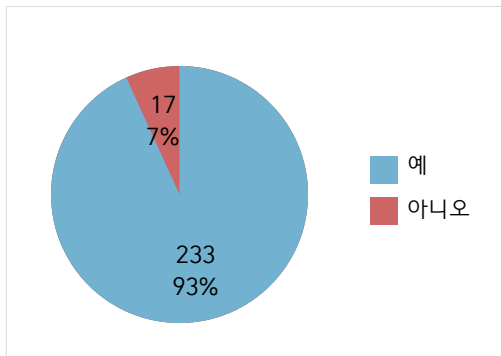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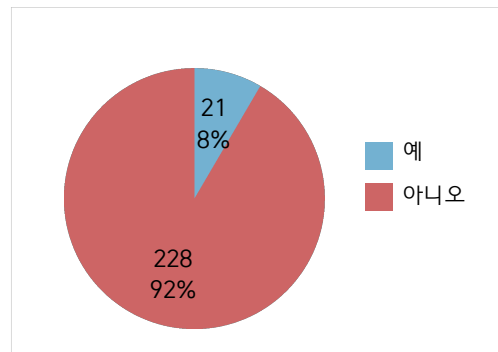
[그림 2] 소속 사업장 규모

2) 작업현장과 작업복관련 실태

-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이 93.2%,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작업장에서 용접, 도장, 관 교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작업복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전체 응답자의 8.4%에 불과하고, 91.6%가 사업장으로부터 작업복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단순 작업복을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플랜트 건설의 업무 분야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기능을 갖춘 작업복(개인보호구, 안정장비 외에)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항목에서 작업복은 제외되어 있음¹⁾
 - 작업복은 노동자의 건강권과도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법개정운동 등을 통해 의무지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3] 사업장의 유해물취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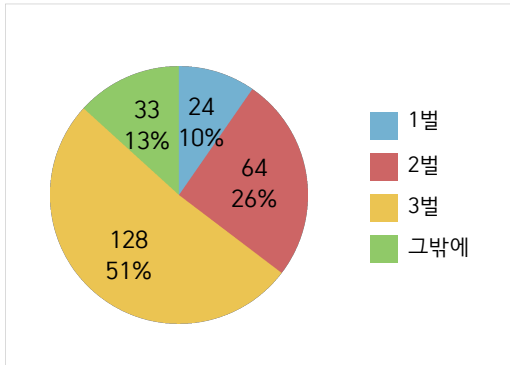


[그림4] 사업장의 작업복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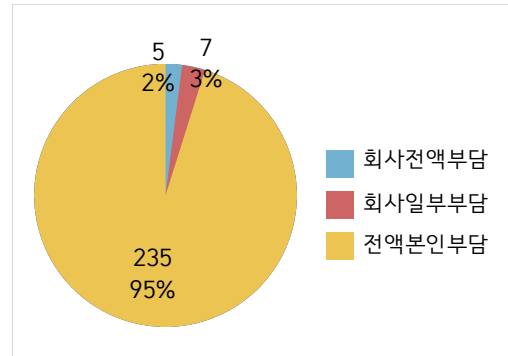
- 작업복은 전체 응답자의 77.1%가 2~3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량은 3벌(51.4%)이 가장 많았고, 2벌(25.7%), 그밖에 5벌~10벌 등 (13%) 순
- 작업복 세탁 비용은 전체 응답자의 95.1%가 본인 부담, 회사 일부 부담은 2.8%, 회사 전액 부담은 2%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5% 미만임
 - 세탁 장소는 전체 응답자 95.2%가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4%, 사업장 0%임
 - 가정에서 세탁하는 이유로는 사업장에 세탁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2.8%,

1) 작업자의 식별 등을 위한 단순작업복과 구분하여, 플랜트건설에서 재해나 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목적의 개인보호구와 안전장구 범위에 기능성 작업복(방한복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현행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0.1.23.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목 3.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나 목에서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작업복, 방한복 등을 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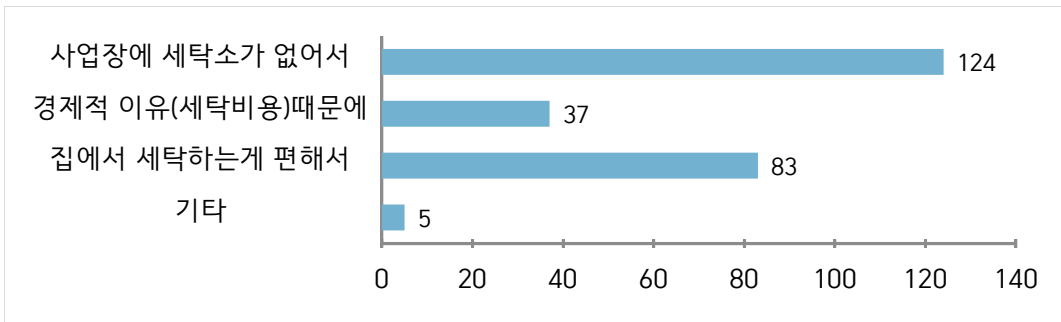
집에서 세탁하는 게 편해서 35.3%, 세탁 비용이 부담되어서 15.7%로 나타나, 사업장에 세탁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5] 작업복 보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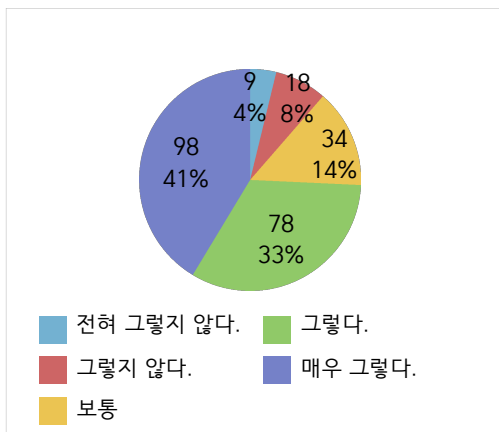


[그림6] 작업복 세탁비용 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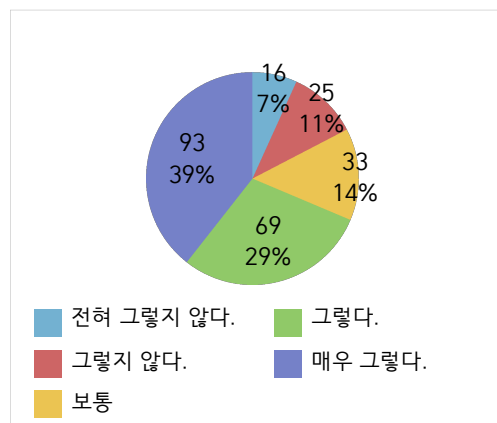


[그림7] 가정에서 세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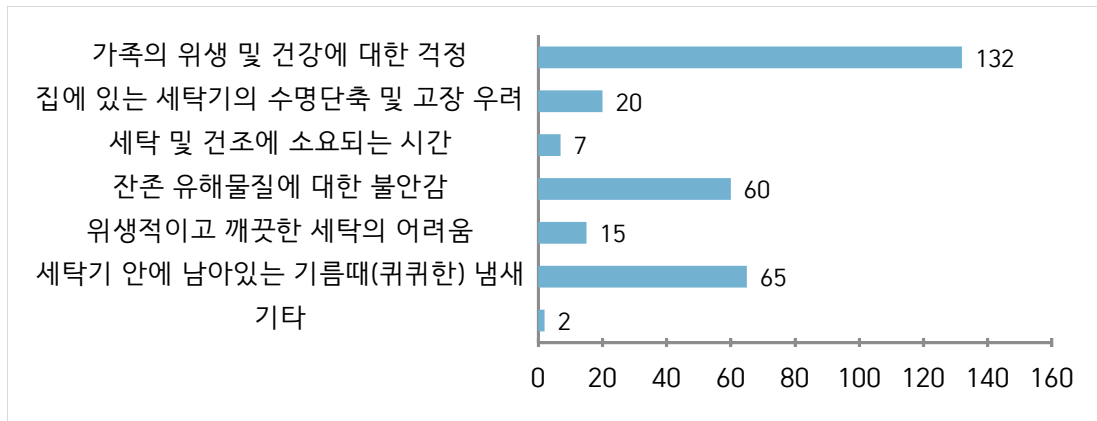
- 가정에서 세탁할 때 세탁조의 오염물질 잔류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전체 응답자의 74.3%(그렇다 32.9%, 매우 그렇다 41.4%)가 답하였고,
 - 가정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때의 애로점으로는 가족의 위생과 건강염려 52.8%, 세탁조 안에 붙어있는 기름때와 냄새 26%, 잔존유해물에 대한 불안감 24%로 가족과 자신의 건강장애를 염려하고 있음



[그림7] 오염물질 잔류, 교차오염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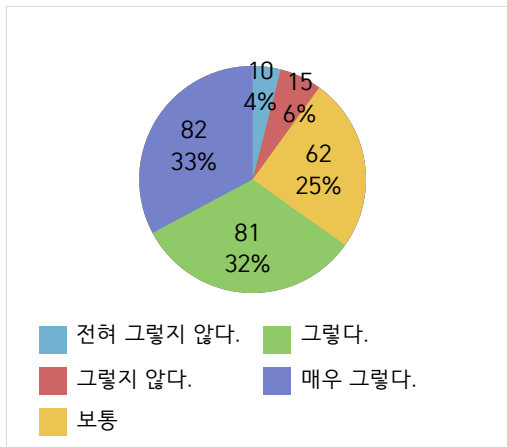


[그림8] 세탁비용의 경제적 부담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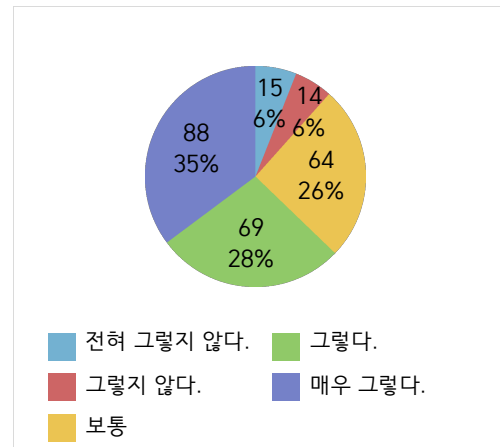


[그림9] 가정에서 세탁 시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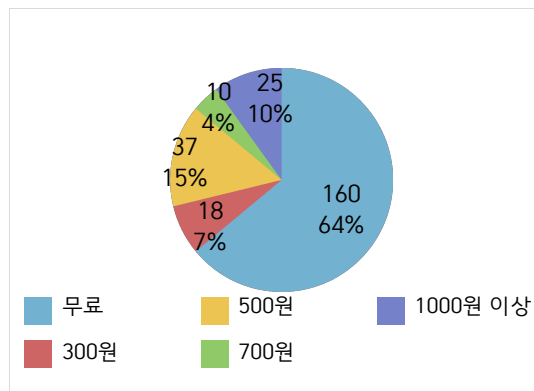
- 작업복 세탁소 설치 필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2%(그렇다 32.4%, 매우 그렇다 32.8%)가 설치에 긍정적임
- 세탁소가 설치된다면, 62.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비용으로는 무료 64%, 500원 정도 14.8%, 1000원 이상 10%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용의사가 있으며, 무료이용을 선호함



[그림10] 세탁소 설치 희망



[그림11]세탁소 설치 시 이용의사



[그림12] 노동자의 세탁비용부담금

3) 결론

-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작업복 보유 수량은 평균 2.5벌 정도이며, 사업장에서의 작업복 지급 비율은 8.4%에 그쳐, 노동자의 91.6% 본인 부담으로 단순 작업복을 구매하여 착용
- 10명 중 9.5명 이상이 집에서 세탁(95.2%)하고 있으며, 세탁 시에 오염물질 잔류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다른 옷)오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74.3%에 이릅니다
-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은 93.2%로, 단순 작업복 착용만으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작업에 필요한 기능성 작업복 지급이 요구됨
- 세탁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는 95%, 일부 부담 3%, 사업장 부담은 2%에 그침
-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과 이용의사가 각각 65%와 62.8%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음
- 작업세탁소 이용 시 적정 세탁 비용은 무료를 가장 선호(64%)하며, 1벌당 500원(15%), 300원(7%) 순임

3. 정책적 제언

1)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방향

-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탁소 설치, 운영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동자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 비용은 자기 부담률이 높았고, 세탁소 이용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의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은 비용부담이었음
 - 월평균 개인 부담 작업복 세탁 비용과 세탁 횟수, 노동자의 요구, 욕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개인부담 비율(지원 금액)을 정하고 단계별로 증·감액을 검토해야 할 것임
 - ※ 현재 가동 중인 김해산단의 공동 작업복 세탁소와 영암군의 대불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운영계획(안)에서는 1벌당 노동자부담액을 500원으로 책정함
- 둘째, 양질의 충분한 세탁설비를 도입하고, 세탁기술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조사 결과, 집에서 세탁 시 가족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잔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작업복 세탁소에서 세탁하더라도 위생적이고 깨끗한 세탁, 잔존 유해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 삼호현대중공업 사내 세탁소 이용 노동자 역시 위와 같은 불안감이 있음
- 업종별, 작업 내용에 따른 유해성 파악과 분류 세탁이 필요함(예를 들어, 도장, 기름, 화학물질, 용접 등에 따라)
- 따라서 세탁기, 건조기 등 양질의 충분한 세탁 설비를 도입, 세탁물의 특성에 따라 세탁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 이용자의 기대(깨끗한 세탁, 잔존 유해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용 지급방식과 세탁물 수거, 배달방식을 운용해야 함
 - 세탁물의 종량제 상시 정산, 월별 정산 방법 등과 지급방식을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사업장과 협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이용률을 높여야 함
 - 세탁인력 이외에도 세탁비 지원 및 개인부담금 관리 인력과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인력이 필요함

2)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방향

- 첫째, 유해 물질 및 작업복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고 있음에도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나, 물질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업종별 유해물질과 유해 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업장과 노동자,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세탁소 관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세탁 인력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세탁인력, 행정 정산 지원인력, 수거 배달인력 그밖에 세탁소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유해 물질 및 작업복의 유해성 홍보 기획 및 운영, 세탁소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업종별 특성과 오염물질에 따른 세탁기술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세탁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셋째, 세탁소가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내 공단 및 산단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소득 주도, 노동 존중, 사회적 가치실현 등)와 노동이 당당한 전남의 정체성과 위상에 맞게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 일자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보장,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등 양질의 일자리와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여수산단, 광양산단, 대불산단 등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주변의 공단 및 산단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확대해나가야 함
- 넷째, 세탁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 민관 협치 활성화 필요
 - 세탁소설치운영에 민(기업)과 관(행정), 노동자 인권 및 건강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므로 공동 논의와 실행구조를 만들어 세탁소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이용률 제고를 담보, 지역 내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해야 함
 - 아울러 세탁소 설치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노동)복지 격차 완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 실행해야 나가야 할 것임
- 마무리
 - ※ 현재 작업복세탁소 사업을 시행 중인 김해산단(경남), 추진 중인 하남산단(광주), 대불산단 내에 세탁소 설치 계획의 구체안을 내놓은 영암군 등이 활동하고 있음
 - ※ 성공적인 세탁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 산단 협의회(입주기업대표자 모임), 노동조합, 해당 시군과 의회 등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으로 협조 내지 실천이 가능한 조직마련이 우선임
 - ※ 작업복 세탁소는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탁소의 이용 대상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결과를 공표하는 장(기자회견, 정책토론회 등)을 마련, 세탁소 설치를 위한 방안을 세우도록 논의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대불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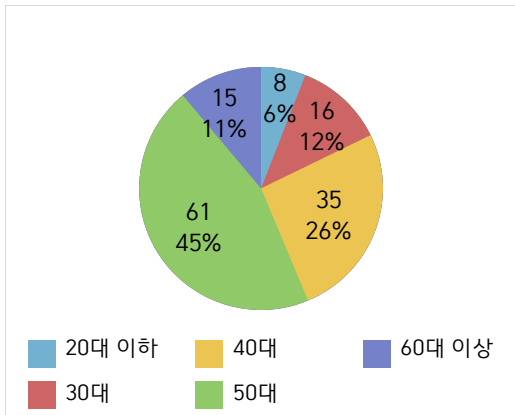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조 사 명: 대불산업 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작업복 세탁소·통근버스·조식 식당 설치 등에 관한 수요조사
- 조사 목적: 대불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통근버스운행·조식 식당설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조사 방법과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기간 중 중소기업 근무 노동자)
- 설문조사 표본(150부), 유의한 조사서 135부
 - 설문 내용: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통근버스운행·조식 식당설치 필요성 및 이용 수요 조사(총 33문항)
 - 작업복세탁소설치 필요여부, 설치 시 이용여부 및 세탁 비용 자기 부담률 등
 - 통근버스운행의 필요여부, 운행 시 이용여부 및 운임의 자기 부담률 등
 - 조식 식당설치의 필요여부, 설치 시 이용여부와 식대 수준 및 자기 부담률 등을 내용으로 함
- 조사 기간: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17일까지(8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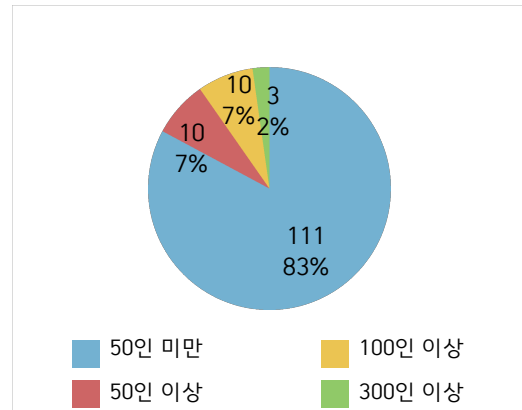
2. 주요결과 요약

1) 일반 사항

- 전체 응답자의 90%(122명)가 남성, 10%(13명)가 여성이며,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82%를 차지, 현장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짐
 - 연령별 분포는 50대 45%, 40대 26%, 30대 12%, 60대 이상 11%, 20대 6% 순으로 50대 이상이 56%이며, 결혼 상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0%가 기혼이며, 비혼 18%, 기타 1% 순
- 근무 사업장의 규모는 50인 미만 83%,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각각 7%이며, 300인 이상 2% 순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8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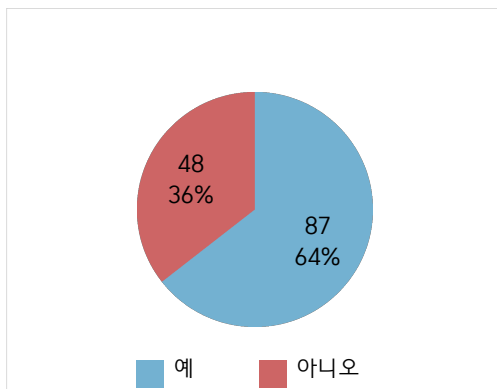
[그림1]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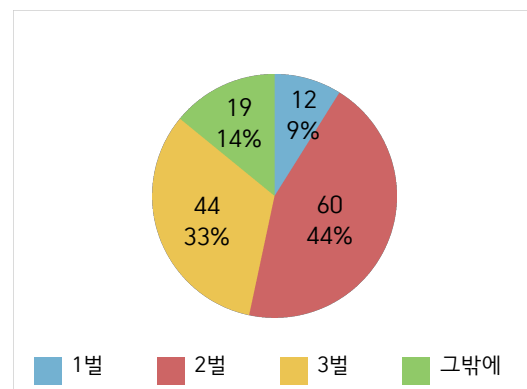
[그림2] 소속 사업장 규모

2) 작업현장과 작업복관련 실태

- 유해 물질(화학물질, 용제, 페인트, 용접 등)취급 사업장 근무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64%를 차지함
- 노동자의 보유량은 2~3벌이 전체 응답자의 77%로 나타났으며, 수량은 2벌(44%) 이 가장 많았고, 3벌(33%), 1벌(9%), 그밖에 14%(19명) 안에는 작업복이 없거나(2명), 5벌(6명), 10벌(2명), 수량 미기재(9명),



[그림3] 사업장의 유해물 취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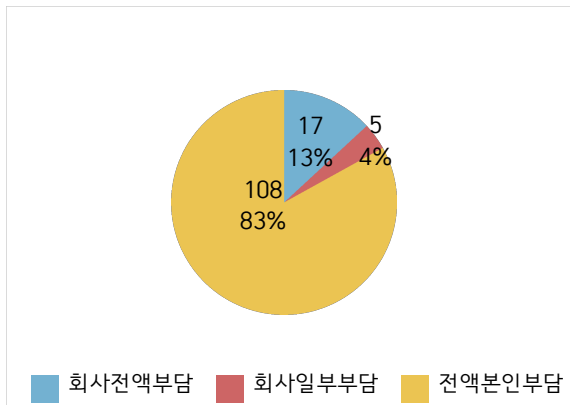


[그림4] 작업복 보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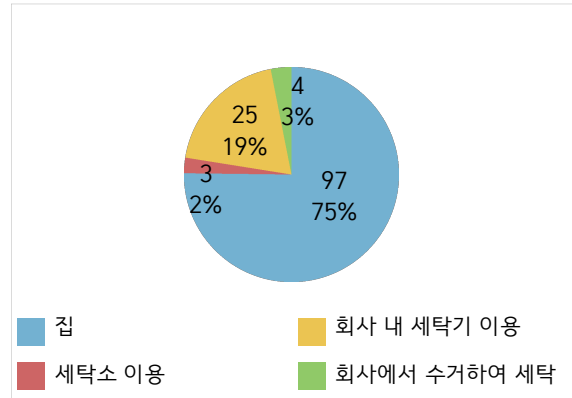
- 작업복을 입은 채로 출퇴근하는 비율과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각각 50%로 나타남
- 작업복 세탁 비용은 본인 부담 83%, 회사 일부 부담 4%, 회사 전액 부담은 13%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률보다 개인 부담률이 높음
 - 세탁 장소는 전체 응답자 75%가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2%, 사업장 내 세탁기 이용 19%, 회사에서 수거하여 세탁하는 경우도 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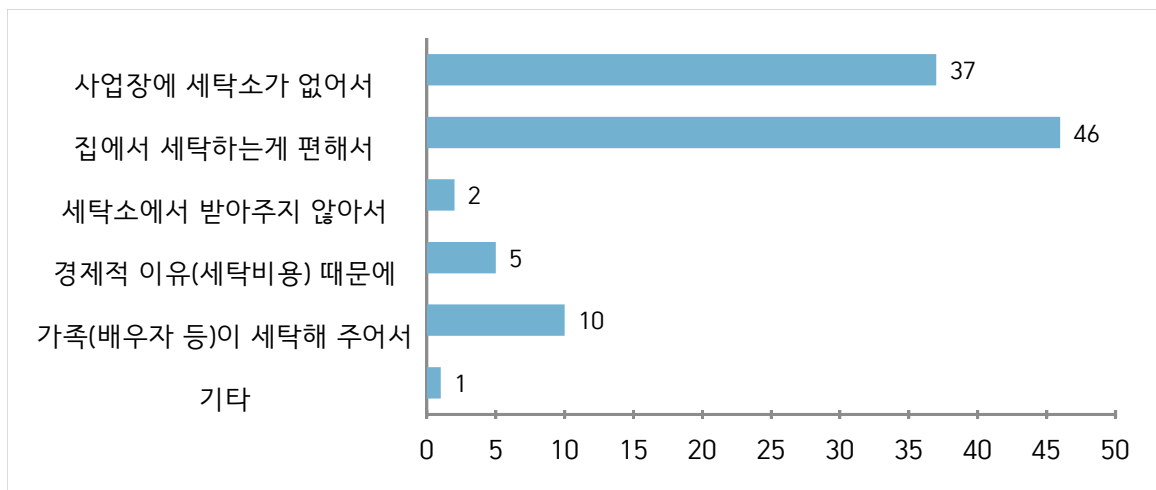
- 세탁을 가정에서 주로 하는 이유로는 집에서 세탁하는 게 편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에 세탁소가 없어서 37%, 가족이 세탁해 주어서 11%, 세탁 비용이 부담되어서 5%, 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2%로 나타남



[그림5] 작업복 세탁비용 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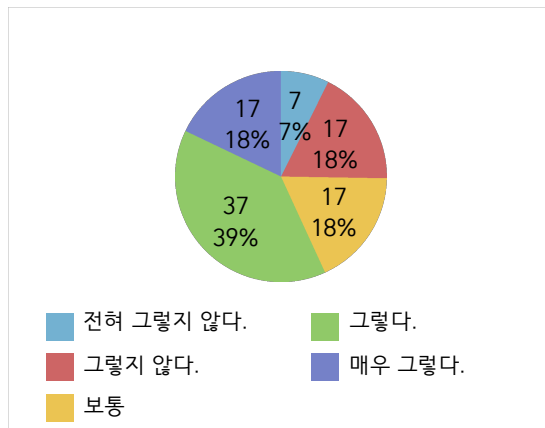
[그림6] 작업복 세탁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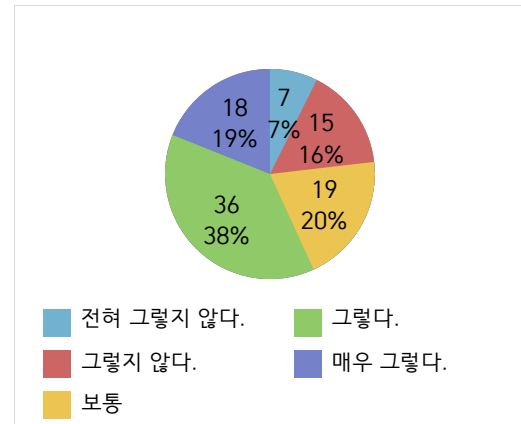
[그림7] 가정에서 세탁하는 이유

- 가정에서 세탁할 때 세탁조의 오염물질 잔존이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오염이 우려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7%(그렇다 39%, 매우 그렇다 18%)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25%(그렇지 않다 18%, 전혀 그렇지 않다 7%)로 나타남
- 작업복을 세탁소에 맡기는 비용에 전체 응답자 57%(그렇다 38%, 매우 그렇다 19%)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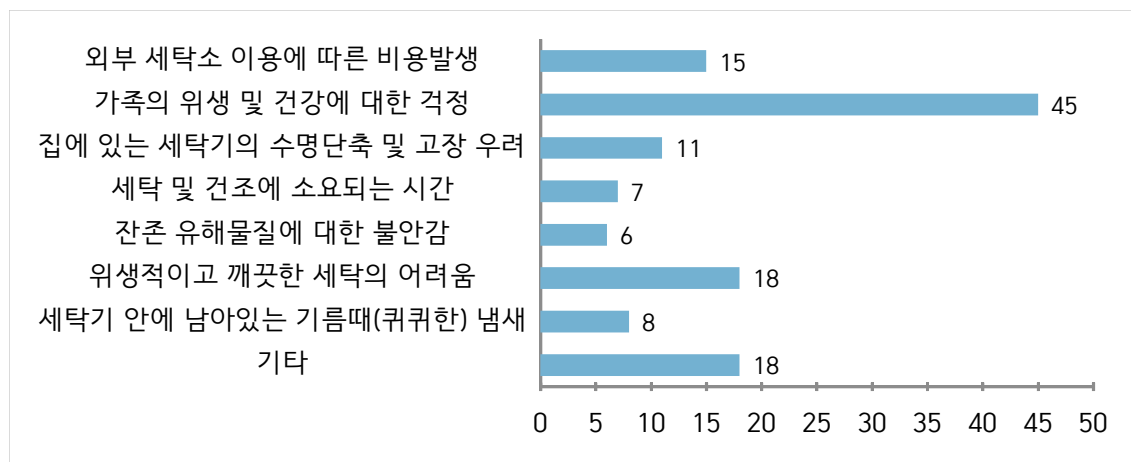
- 가정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때의 애로점으로는 가족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걱정 35%, 위생적이고 깨끗한 세탁의 어려움 13%, 외부 세탁소 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 12% 순으로 나타나, 가족과 자신의 건강장애를 염려하고 있음



[그림7] 오염물질 잔존·교차오염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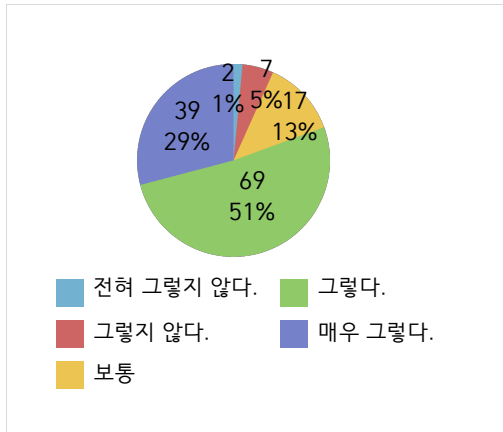


[그림8] 세탁비용의 경제적 부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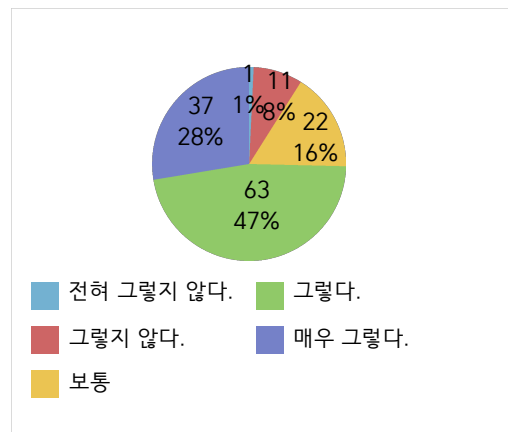


[그림9] 가정에서 세탁 시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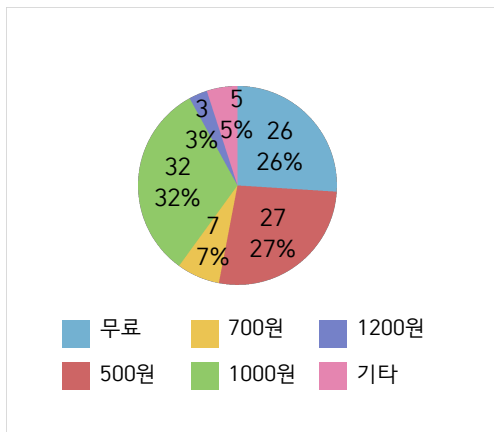
- 작업복 세탁소 설치 필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29%)가 설치에 긍정적임
- 세탁소가 설치된다면, 75%(그렇다 47%, 매우 그렇다 2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비용으로는 1000원 이상 32%, 500원 정도 27%, 무료 26%, 1200원 3%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용의사가 있으며, 1000원 이상이라는 답이 높게 나오고 두 번째 500원, 3번째 무료이용이라 답함



[그림10] 세탁소 설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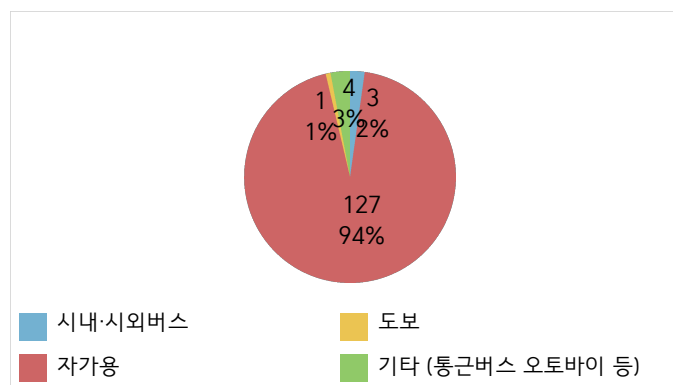
[그림11] 세탁소 설치 시 이용의사



[그림12] 노동자의 세탁비용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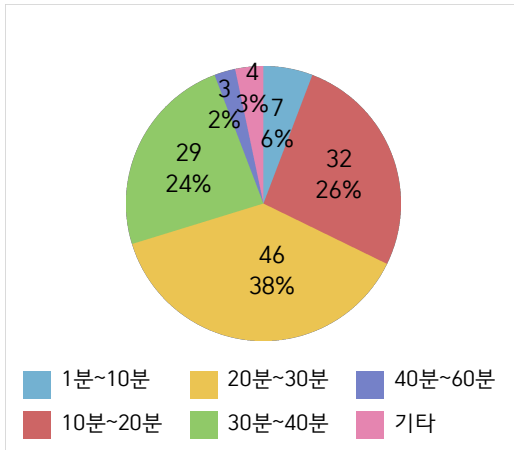
3) 통근버스 운행수요

- 출퇴근 때 이용교 통수단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94%가 자가용 차량(자차, 카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2%, 기타(통근버스, 오토바이 등) 3% 순으로 자가용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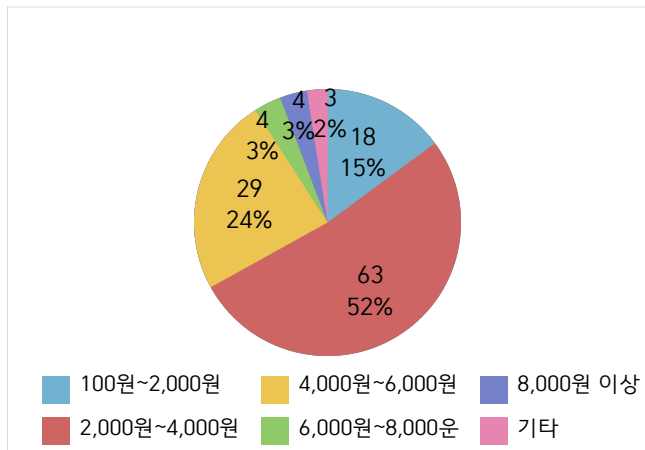


[그림13] 출퇴근 시 이용 이동수단

- 출퇴근의 평균소요시간은 편도 1회 기준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38%, 10분 이상 20분 미만 26%, 30분 이상 40분 미만 24%로 대체로 20~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출퇴근의 비용은 편도 1회 기준으로 2000원 이상 4000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52%, 4000원 이상 6000원 미만 24%, 2000원 미만 18%, 6000원 이상 8000원 미만 3%, 8000원 이상 3% 순이며, 대체로 2000원 이상 6000원 미만이 7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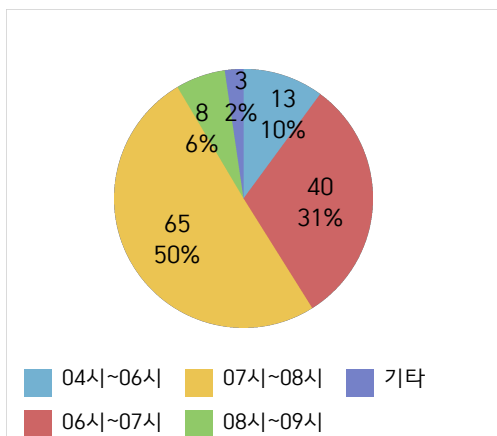


[그림14] 출퇴근 평균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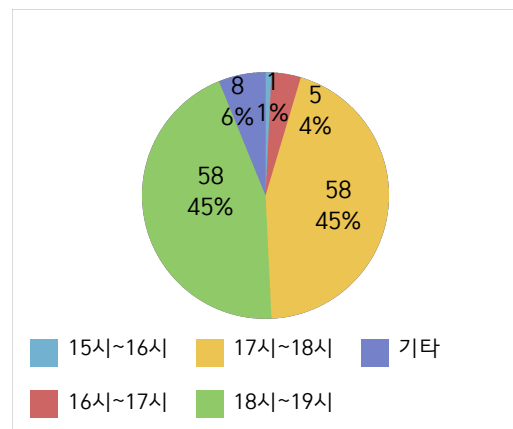


[그림15] 출퇴근 평균소요비용

- 출근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40%, 7시에서 8시 사이 35%, 6시에서 7시 사이가 22%로, 75%가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근 시간은 17시에서 18시 사이 45%, 18시에서 19시 사이 45%로 17시에서 19시 사이에 9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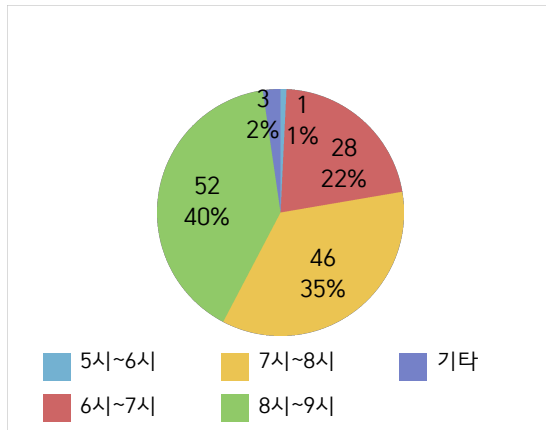


[그림16] 출근시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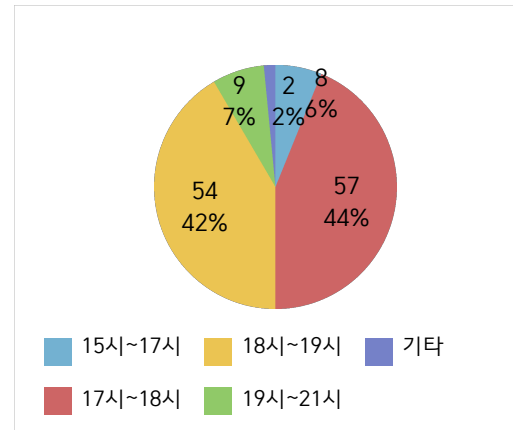


[그림17] 퇴근시간 대

-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시간대는 7시에서 8시 사이 50%, 6시에서 7시 사이 31%, 4시에서 6시 사이 10%로 전체 응답자의 41%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퇴근하는 시간은 17시에서 18시 사이 44%, 18시에서 19시 사이 42%로 17시에서 19시 사이에 8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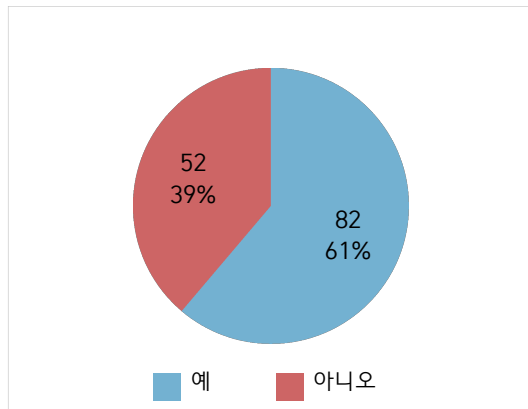


[그림18] 집을 나오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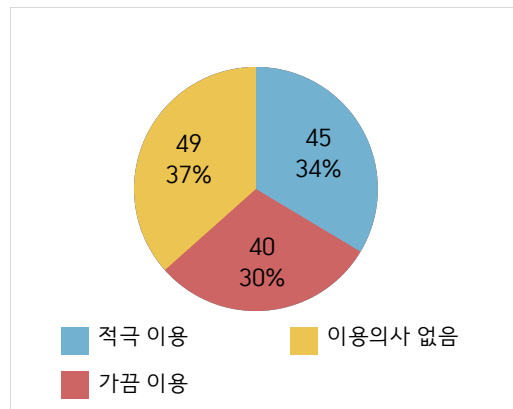


[그림19] 실제 퇴근시간대

- 대불산단 공유 통근버스 운행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82%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통근버스 운행 때에는 64%(적극 이용 34%, 가끔 이용 30%)가 이용의사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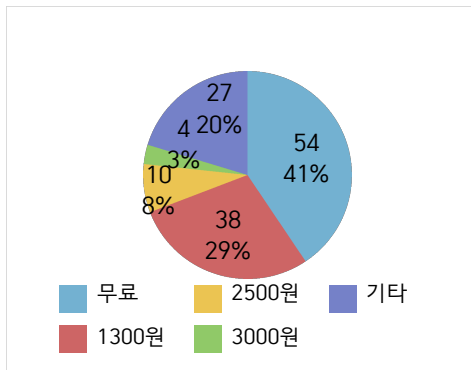


[그림20] 통근버스 필요 여부



[그림21] 통근버스 이용의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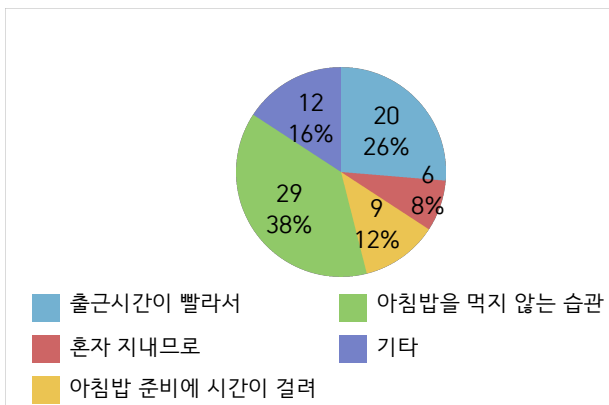
- 집 근처에서 사업장까지 통근비용(왕복) 중, 본인 부담의 최대금액(희망금액)은 전체 응답자의 41%가 무료를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300원 29%, 2500원 8%, 3000원 3% 그밖에 20%(27건 중 1000원 3건, 3800원 1건, 일반버스 요금 2건, 모르겠다 2건 미기재 18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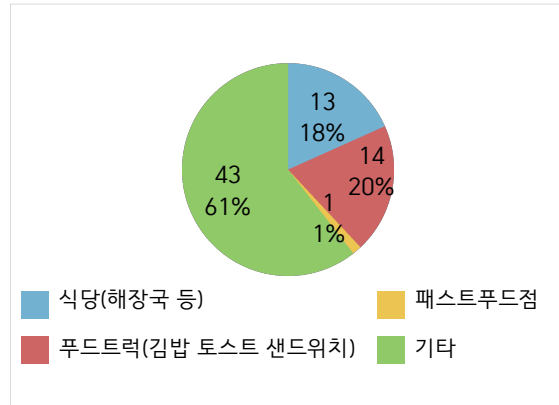
[그림22] 통근비용 부담 최대 금액

4) 조식 식당 수요

-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7%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43%임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43%는 그 이유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게 습관이 되어서 38%, 출근시간이 빨라서 26%, 아침밥 준비에 시간이 걸려 12%, 혼자 생활하므로 8%, 그밖에 16%(12건 중 사업장에서 조식지급 6건, 상세내용 미기재 4건, 늦잠 2건)로 나타남
 - 아침을 거르는 이유로 출근시간이 빠르거나 아침밥 준비에 시간이 걸리거나,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등, 환경적 요인 비율이 46%를 차지함
- 출근길에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61%가 기타(44건 중 회사 구내식당 이용 7건, 라면을 먹는다 1건, 고구마와 우유 1건, 정해두지 않고 먹는다 1건, 상세내용 미기재 26건)응답을 하였고, 푸드 트럭(김밥, 샌드위치, 토스트)이용 20%, 식당(해장국 등) 이용이 18%로 나타남



[그림23]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



[그림24]출근길에 식사를 하는 경우

- 간편식(김밥, 토스트, 샌드위치, 떡 등 제공)조식 식당 개설의 필요성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58%(그렇다 40%, 매우 그렇다 18%)가 긍정적임
- 조식 식당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전체 응답자의 39%가 1000원, 1200원 21%, 무료 16%, 500원 9%, 700원 5%순이며 그밖에 의견 9%(7건 중 2000원 3건, 5000원 1건, 상세내용 미기재 7건으로 조식 식당 식비로 1000원~1200원이 60%로 나타남

5) 결론

(1) 일반현황

- 대불산단 내 노동자의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56%이며, 30대 12%, 20대 6%로 현장의 고령화, 청년층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짐

(2) 작업복관련 실태

-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 근무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64%이며, 작업복 보유량은 평균 2.4벌(2~3벌 보유자가 전체 응답자의 77%)
- 10명 중 7.5명 이상이 집에서 세탁(75%)하고 있으며, 세탁 시에 오염물질 잔류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다른 옷)오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57%에 이르고, 가정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때의 애로점으로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걱정이 35%로 나타나, 가족과 자신의 건강장애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탁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는 83%, 일부 부담 4%, 사업장 부담은 13%로 나타났으며, 세탁소에 맡기는 비용을 부담으로 여기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7%를 차지함
-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과 이용의사가 각각 80%와 75%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음
- 작업복 세탁소 이용 시 적정 세탁비용은 1벌당 1000원 이상이 35%(1000원 32%)로 나타났고, 500원 27%, 무료가 (26%) 순으로 나타나 500원~1000원대가 과반수를 차지함

(3) 통근버스 운행수요

- 출퇴근 이용 교통수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94%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며, 출퇴근 때 평균소요시간은 20~30분으로 나타났고, 비용은 2000~6000원 미만이 76%를 차지함
- 대불산단 공유 통근버스 운행은 전체 응답자의 82%가 필요성을 인식하며, 64%가 이용의사가 있다고 답함
- 통근(왕복) 비용 중 이용자부담의 최대금액은 전체 응답자의 41%가 무료운행을 선호, 1300원(29%), 2500원(8%) 순으로 나타남

(4) 조식 식당 설치수요

-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7%이나, 때때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어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아침식사를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침식사를 못하는 이유로는 출근시간이 빠르다거나 식사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46%가량을 차지, 조식 식당의 설치 필요성이 있음
- 출근길에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라면, 고구마, 우유, 샌드위치, 해장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임
- 조식 식당(간편식으로 김밥, 토스트, 샌드위치, 떡 등 제공)설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8%가 필요, 20%가 필요 없다고 답함
- 조식 식당 이용 때 본인 부담 최고액은 전체 응답자의 39%가 1000원, 21%가 1200원, 16%가 무료, 9%가 500원 순으로 나타남

3. 정책적 제언

1)-1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방향

- 조사 결과 여수산단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양질의 충분한 세탁시설 도입 및 세탁 기술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업종별, 작업 내용에 따른 유해성 파악과 분류 세탁이 필요함(예를 들어, 도장, 기름, 화학물질, 용접 등 업무내용 고려)
 - 세탁물의 특성에 따라 세탁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 이용자의 기대(깨끗한 세탁, 잔존 유해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동자 부담 등에 관하여는 여수산단의 작업복 세탁소 운영방향을 참조할 것
 - 현재 영암군의 대불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운영계획(안)에서는 1벌당 노동자 부담액을 5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현재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 중인 경남 김해산단의 경우, 노동자부담액은 500원임

1)-2.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방향

- 여수산단에서 제안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첫째, 유해 물질 및 작업복 유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며, 둘째로 세탁소 운영요원의 전문성, 즉 업종별 특성과 오염물질에 따른 세탁기술의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체계적인 세탁소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세탁소가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내 공단 및 산단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노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 민관 협치의 활성화가 필요

2)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지원 방향

- 첫째, 노동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조사 결과, 무료운행을 희망하는 비율은 16%로 그리 높지 않고, 1300원~2000원 선을 적정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적정 개인 부담비율(지원 금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이용률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 감액을 고려해야 함
- 둘째, 통근버스 운행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지원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사항
 -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중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2020 ~2022까지, 1년/5억 원까지 지원 등의 정책지원이 있음
 - 대기오염 심각으로 2020.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남부권(전남, 목포, 영암 등) 지정에 따른 대기오염 줄이기 운동 방안의 하나로 통근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통근버스는 친환경 차량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차량구매 등은 산단 협의회, 행정당국(전남도, 목포시, 영암군)과 지방의회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

- 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통근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노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 민관 협치 활성화 필요
- 넷째, 통근버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산단 통근버스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현재 대불산단 노동자들의 통근에 걸리는 시간 등을 기준으로 통근버스의 필요성에 의문 제기 여지도 있으나, 조선업의 불황으로 관련 업종도 함께 침체한 상황(2013년 4분기 전체 노동자 12,936명에서 2019년 3분기 7,196명으로 감소,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각 연도 참조)을 전제, 경기 활성화가 되면 또다시 노동자 수 증가 등으로 출퇴근 때 교통체증, 사고위험과 대기환경 오염의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3) 조식 식당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방향

- 조식 식당 설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지 등 노사상생 인식에서의 접근과 민관 협치 활성화 필요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침을 거르는 이유로 환경요인도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함
- 불규칙, 불균형적인 식사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해 요인이 되며, 점심을 폭식하거나 간단히 때우는 경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
- 노동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조사 결과, 무료제공 희망은 전체 응답자의 16%, 1000원~1200원 60%인 점을 고려하여, 적정 개인 부담 비율(지원 금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의 이용률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 감액을 고려해야 함
- 간편식(김밥, 토스트, 샌드위치, 떡 등)을 제공하는 식당 설치 산단 내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주변의 식당을 시간제로 임차, 판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함
- 시간제는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 전후로 1시간가량, 산단 내 민간 식당

- 을 임차 활용, 공공건물 내 설치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간편식 제조, 판매 등은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실버인재활용) 등의 참여방식이나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간편식은 식품위생 준수와 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민간 식당 외에 간편식의 푸드 트럭 판매에 관해서는 식품위생 점검이 정기적, 지속해서 이루어져 식중독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IV. 맺으며

여수산단은 1979년 완공된, 단일 석유화학단지로는 세계 1위,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울산산업단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굴지의 산업단지이며, 한화케미칼, LG화학,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바스프 등을 비롯한 대기업과 굵직한 외국계 회사를 비롯하여 283개 사업장이 들어와 있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2년간 플랜트 신설 및 보수작업에 약 2만 7천 명의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일시에 산단으로 몰려들 예정이다. 작업 내용상 오염,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긴급히 작업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산업 환경, 노동복지차원에서)시설 점검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실태 파악을 위해 우리 센터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의 의뢰로 가장 필요한 작업복 세탁소라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수요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대불산단은 조선업의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점검과 정비-도장, 용접 등의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세탁할 곳-를 목적으로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작업복세탁소 등의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본디 기획한 조사범위(영역)와 그 대상을 줄이고, 설문조사 문항도 핵심사항만을 묻는 정도로 간결하게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로 얻어진 결과는 노동권익의 신장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 갖춰져야 할 시설로 작업복세탁소가 두 산단의 공통과제이며, 여수산단은 샤워시설, 대불산단은 통근버스와 조식 식당이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 조사 결과와 정책적 제언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슈 2

목포지역 택시 전액관리제의 현황과 정착방안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본부장 김 수훈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가?
- III. 전액관리제의 활성화 방안
- IV. 맺으며

목포지역 택시 전액관리제의 현황과 정착 방안

I. 들어가며

2020년 1월부터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면 시행으로 법인택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를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사납금제도는 택시운전노동자(이하 ‘택시노동자’)가 회사에서 정한 금액만 입금하면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받는 급여와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택시노동자의 수입이 되는 구조다. 따라서 사납금보다 더 벌어들인 수익은 개인 수입이 되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되기에 장시간 노동, 저임금 문제, 과속 및 신호위반, 서비스 질의 하락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 즉 회사가 과중하게 정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택시노동자가 자신의 돈으로 미달한 금액을 메워야 한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고자 택시노동자들은 시간과 다툼 속에서 불법 승차와 과속, 불친절 등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이고 해묵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택시노동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납부하고 일정한 비율에 맞춰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제도다. 택시노동자들은 그 동안 정액사납금제, 지입제, 도급제 등으로 각종 폐단이 만연했던 택시업계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임금구조를 ‘완전 월급제’의 전 단계로서 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을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기존의 사납금제에 익숙해진 일부 택시노동자들의 정서가 맞물려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목포지역의 경우 2020년 1월 이후, 사용자는 친화적인 노동조합(제1노조)과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이른바 ‘운송기준수입금’이라는 기준액을 정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불성실근로자(또는 저성과자)’로 보고 승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가불 형태의 선납금 증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에서 전액관리제 실시 이후 사업장에서 승무정지 등 위반사례 및 전액관리제 정착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II.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가?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에게 택시노동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택시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것으로 2020.1.1.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2019.12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발표하여,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성과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성과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운영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목포지역 택시업계의 경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제의 변형 형태인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운영하면서, 월 또는 1일 기준액을 정해 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해당 택시노동자에게 선급증서(가불금)를 제출하게 하고, 임금지급 시에 정액 임금에서 가불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아래는 2020년 목포지역 한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및 부속협정서상의 내용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월, 1일 각각의 기준충족여부가 불성실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1안>

구 분	주간	야간	1인1차제
월 기준	4,182,000	4,845,000	5,278,000
1일 기준 (26일)	160,846	186,346	203,000
월 임금	1,776,900	1,907,180	1,907,180

※ 소정근로시간 : 6시간 40분(택시미터요금 기준 5시간 30분)

<제2안>

구 분	주간	야간	1인1차제
월 기준	3,510,000	4,186,000	4,628,000
1일 기준 (26일)	135,000	161,000	178,000
월 임금	1,254,910	1,385,190	1,385,190

※ 소정근로시간 : 4시간 40분

<목포시 제3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5년>

운행대 수	운행시간 (분)	영업시간 (분)	시간 실차율	주행거리 (KM)	영업거리 (KM)	거리 실차율
3,219	2,947,508	915,334	31.1%	974,778	416,157	42.7%

※1) 실차율: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거리 실차율: (승객승차 운행거리/ 총 운행거리)X100

3) 총 운행거리: 출고(영업개시)부터 입고(영업종료)까지의 거리

목포시 제3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보고서의 시간 실차율(31.1%)을 고려하면 택시미터요금 기준으로 5시간 30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4년 후인 2019년 목포시 제4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1-4500, 2002)에 의하면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 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은 아니더라도 동 임금협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 된다’는 점을 무시한 채 실 운전시간만을 임금기준으로 하여 생기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문제, 과속 및 신호위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택시노동자들을 옴아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1일 최소 15시간 근로를 사실상 강제한다면 택시노동자들에게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 아닐까?, 1일 최소 15시간 근로를 제공은 택시노동자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1일 1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가? 전액관리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승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로 최근 한 택시회사의 경우 월 또는 1일 기준액을 정해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택시노동자에게 선급증서(가불금)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목적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시행 이후 오히려 택시노동자들이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체불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III. 전액관리제의 활성화 방안

먼저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법의 엄정한 집행과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임금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노·사간의 신뢰 형성은 결국 전액관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사의 의식이나 인식 문제로 귀결된다. 즉,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상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택시회사의 경우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결과적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기존사납금제도로 회귀를 꿈꾸고 있다. 택시사업주들도 불투명한 경영 속에서 음성적인 수입, 탈세 등의 편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서비스 차별화 등 혁신을 통해 적정한 이윤 확보를 통한 수익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사용자의 개별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및 수금까지 택시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담당한다는 노동과정상의 업무특성으로 인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택시라는 생산수단을 빌려서 일한다는 소

사장 의식이 강하다. 전액관리제하에서는 소사장이 아닌 노동자로서 소정근로시간 만큼 열심히 일하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노·사가 함께 기존 사납금의 변형이 아닌 실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상호 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회사 측에서는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택시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를 토대로 한 임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전액관리제 시행초기 발생하는 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택시는 고요금 교통수단이어야 하나 대중교통의 민영제로 인한 불편을 택시를 통해 해결해왔던 국가의 교통정책과 물가안정 정책으로 인해 오래 동안 저요금교통수단으로 취급해 온 결과 준(準)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버스, 지하철과 같이 택시업종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전면 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어 전액관리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IV. 맺으며

현재 전액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존 사납금제도로 회귀하려는 시도 속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오히려 장시간 노동, 승무정지(징계)와 해고위험에 노출되고, 노골적인 임금체불 상태를 경험하는 등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기득권의 반발 등으로 개혁적인 조치들이 좌절되는 사례를 우리들은 셀 수 없이 많이 경험했었다. 오랫동안 택시노동자들이 주장해 왔던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사 대등과 상생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향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노동권익상담사례

· 전남도내 노동단체 및 상담관련 기관 등의 접수사례와
전국현황 스케치·

- I. 전남 사례현황
- II. 전국 현황(갑질119)

I. 전남 사례현황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확산위기와 노동권익침해

- 코로나19(국내 감염병 위기 경고 '심각'단계)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진행
- 전남은 코로나19 확진자 9명(6명 격리 중, 3명 격리해제)으로 발생률 0.48로 가장 적은 지역(제주 9명, 발생률1.34)
 - 대구,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만 여명 확산 조짐 속에서 전남은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됨
 -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식당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부진으로 단기임시직(아르바이트) 등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노동인권 침해사례 발생

구 분	확진환자(누진)	완치(격리해제)	치료 중(격리 중)	사망
전국	9,661	5,228	4,275	158
서울	426	92	334	0
강원	36	21	14	1
경기	463	160	298	5
경남	95	65	30	0
경북	1,298	772	488	38
광주	20	13	7	0
대구	6,624	3,837	2,676	111
대전	34	17	17	0
부산	118	87	28	3
세종	46	12	34	0
울산	39	20	20	0
인천	58	15	43	0
전남	9	3	6	0
전북	13	7	6	0
제주	9	4	5	0
충남	127	83	44	0
충북	44	21	23	0

[출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내 발생현황' 질병관리본부 (2020.3.30.기준)]

□ 코로나19 관련 노동 상담사례

- 전남노동인권센터에서는 3월 17일~3월 26일까지 민주노총전남본부, 한국노총전남본부 및 전남 도내 소재 노동상담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상담 사례를 수집

- 총 10건 집계, 상담유형은 아래와 같이 지원정책문의, 무급휴가, 연차강요, 노동조합 활동방해, 불이익, 임금삭감 등임

구분	연차강요	임금삭감	불이익	무급휴가	노동조합 활동방해	지원정책문의	합계
상담건수	2	1	1	2	1	3	10
소계(%)	20	10	10	20	10	30	100(%)

[상담유형에 따른 분류]

- 업종유형은 음식점 서비스, 운수, 제조업 등임

구분	서비스	음식점	운수	제조	합계
상담건수	3	3	2	2	10
소계(%)	30	30	20	20	100(%)

[업종에 따른 분류]

○ 연차휴가 강요사례

○○의 영양사로 재직 중 휴가를 얻어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지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자가 격리를 지시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자가 격리 동안의 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한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도 없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노무 제공을 거부하면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 특별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평균임금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삭감 사례

○○식당에서 설거지 및 서빙 일을 하는 20세 아르바이트 청년, 코로나 19때문에 식당에 손님이 없어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이른 시간(저녁 8시)에 퇴근하라고 하면서 급여도 삭감시킬 예정이라고 함

- 소정근로시간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은 삭감은 법 위반임

○ 무급휴직 사례

식당 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사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어 식당 영업이 어려우니 당분간 휴업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무급휴직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직원 몇 명과 함께 휴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데, 속은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한데 이럴 때 당사자인 저는 모른 척 계속해서 무급휴직상태로 지내고 있어야 하는지?

-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 휴직 강요 및 일방적 휴직 조치를 할 수 없고,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손님 감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대상임
- 사용자는 무급휴직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만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 근무 중인 동료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음

○ 예약취소·고객감소로 무급휴직 권고하는 관광버스업계 사례

- 계절 상 성수기로 호황을 누려야 는 관광버스 업계의 경우, 지자체 봄 축제 및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예약취소·고객감소 등 예상치 못한 불황을 겪고 있음
-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했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연차사용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도출되고 있음
- 회사는 국가지원정책인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기사들이 지자체에 버스 번호판을 반납(휴업 증명방법)하도록 하고 있음

- 무급휴직 및 연차사용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처리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이 70%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직 일수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참고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때에 이를 하였으나, 최근 요건을 완화하여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택시업계 임금삭감 등 징계 사례

- 2020.1.1.부터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종전 사납금제의 변형인 기준성과급제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주간, 야간, 1인 1차 : 1일 기준액 167,000~207,000).
- 보편적으로 2월~3월 비수기를 맞은 택시업계에 코로나 발생으로 승객수가 급감해 12시간을 운전해도 높은 기준액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징계처분(승무정지) 또는 임금삭감 동의서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 승무정지의 징계처분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우리 센터에서는 권리구제 지원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유로 노동조합활동 방해 사례

- 사내하도급의 자회사 전환에 맞서 정규직화 투쟁 중이며 연차를 이용해 본사 앞 상경 투쟁 진행 중
- 3월 16일 회사로부터 서울지역이 코로나19 확진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서울지역 방문 연차휴가 제한에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 측(사내하도급 3사 대표 명의로)은 회사 내 감염예방을 이유로 상경 집회 참가자에 대해 출근 전 지정병원에서 검사 후 ‘코로나 판정 확인서’를 제출할 것과 미제출시 출근 불가 공문 발송
-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발열 체크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노조만 따로 선별하는 것은 차별로 부당하며, 검사 진행 시간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면 협조하겠다고 이의 제기하자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에 묻겠다고 함
-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도 업무시간 외에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음(상경 투쟁 당시 회사 측 관리자가 감시 차 상경하여 활동하고 다음 날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하였음에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조치를 함
- 코로나 감염예방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하며, 현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임

- 서울지역이 코로나19 확진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서울지역 방문 연차휴가 제한 및 방문한 경우 코로나 판정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실만으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지 않음
- 다만,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은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상경 투쟁 당시 회사 측 관리자가 감시 차 상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II. 전국 현황(직장갑질119 상담 동향)

□ 직장갑질 119, -코로나갑질 특별대책반 가동

-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이후 일어난 직장갑질 현황에 대해 '직장갑질 119'의 조사결과를 소개함
-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에 출범, 2020년 3월 현재 140여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 활동 중
 - 3월 9일부터 코로나갑질 특별대책반을 운영, 48시간 이내 답변, 심각한 제보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지원, 언론제보, 근로감독청원 등을 지원
 - 오픈카톡 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 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
- 코로나 제보 3월 1~3주 제보 2451건 중 코로나갑질 938건(36.9%)
 - 갑질의 패턴 혹은 보이는 특징은 연차강요에서 시작하여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며 3월 1주에서 3주까지 들어온 총 제보 2541건 중 코로나 관련 제보는 983건으로 36.9% 차지함

		일반 상담 (건)	코로나갑질 (건)						상담 총계 (건)
			합계	무급 휴가	연차 강요	해고 권고사직	임금 삭감	불이익 (기타)	
1주 (1일-7일)	건	526	247	109	35	21	25	57	773
	비율	68.0%	32.0%	14.1%	4.5%	2.7%	3.2%	7.4%	100.0%
	코로나 비율		100.0%	44.1%	14.2%	8.5%	10.1%	23.1%	
3주 (15일-21일)	건	542	315	117	43	67	28	60	857
	비율	63.2%	36.8%	13.7%	5.0%	7.8%	3.3%	7.0%	100.0%
	코로나 비율		100.0%	37.1%	13.7%	21.3%	8.9%	19.0%	
증감 (배)		1.0	1.3	1.1	1.2	3.2	1.1	1.1	1.1

[출전: 직장갑질119 3월3주차 코로나갑질통계사례 긴급대책]

- 직장갑질119가 3월 1일부터 같은 달 21일 3주 동안 상담 이메일 전수 분석 결과, 갑질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
 - 항공업에서 시작한 코로나 실업대란은 학원교육, 병원, 사무, 판매 등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급휴직, 해고 등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학원 교육	병원· 복지시 설	사무	판매	서비 스	생산직	숙박음 식점	항공 · 여행	미확 인	합계
합계	20	13	15	13	9	5	10	12	16	113
비율(%)	17.7	11.5	13.3	11.5	8.0	4.4	8.8	10.6	14.2	100.0

[출전: 직장갑질119 3월3주차 코로나갑질통계사례 긴급대책]

□ 고용유지지원 등의 대책 필요

-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소득 보전을 해주고 있음
 - 프랑스는 코로나19 실업수당으로 급여의 84%를, 영국은 휴업수당의 80%를 각각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노동자의 생계보장에 나서고 있음
-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노동자 대책은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밖에 없음
-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위기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노동소득보전금'을 소득이 감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
 - 평균임금이 200만 원인 노동자의 경우 휴업급여(140만 원)와 고용유지지원금(105만 원, 75%)을 받게 될 경우, 노동자의 고통분담금은 60만 원, 회사의 분담금은 35만 원이 되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회사부담금이 14만 원을 줄어들게 됨
- 여기서 문제는 회사가 계약직, 파견직, 하청직,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점
 - 따라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가 정부에 '노동소득보전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우선 지급하고, 회사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면 됨

- 노동소득보전금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기준으로 휴업급여(평균임금 70%)×90%= 평균임금의 63% 이상으로 정할 경우,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함
- 코로나19로 발생한 재난위기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약자계층에 대한 두터운 배려와 관심이 요구됨

	급여액	평균임금 (200만원 기준)	대상	기업 부담금	노동자 부담금	최저임금 대비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1,400,000	5인이상 근로계약			78%
고용유지지원금	휴업급여 75%	1,050,000	1인이상 근로계약	350,000	600,000	58%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업급여 90%	1,260,000	해당 업종	140,000	600,000	70%
노동소득보전금 (특별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평균임금 63%	1,260,000	모든 취업자	없음	740,000	70%

[출전: 직장갑질119 3월3주차 코로나갑질통계사례 긴급대책]

전남노동권익센터 활동의 이모저모

□ 개소식



○ 우리센터 개소식(2020.1.21.)

- 전남도청, 노동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제 시민단체가 참석

□ 업무협약



○ 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2020.2.17.)

○ 조선대병원직업환경의학과/건설노조광주전남전기원지부(2020.2.26.)

○ 전국플랜트건설노조여수지부/조선대병원직업환경의학과(2020.3.12.)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2020.3.31.)

□ 노동법률교육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지부조합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강사/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근로기준법, 산재보상실무, 산업안전보건법”

□ 조사연구(여수·대불산단 작업복세탁소수요조사)



- 여수국가산업단지 플랜트건설노동자대상 작업복세탁소수요조사(3.5결과 발표)
 - 여수시의회 의원, 작업복세탁소 조례제정결의
- 대불국가산업단지 소규모영세사업장대상 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3.11결과 발표)
 -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 영암군의회 각각 작업복세탁소 설치 조례제정에 노력

□ 찾아가는 노동인권상담



- 2020.1.1.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후, 변형사납금제(운송수입금기준액)운영으로 긴장된 노사관계, ‘임금체불’ 기준액미달자에 대한 ‘승무정지’ 등 혼란스런 택시사업장을 찾아, 노동법률팀에서 상담 진행
- 중앙노동위원회 해고무효를 시작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계류 중인 승무정지 등 6건, 구제지원활동